

26차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에 부쳐:

세계 지배자들의 기후 위기 대처는 생색내기 그칠 것이다

올해도 세계는 맹렬한 폭염과 무시무시한 산불, 어마어마한 홍수로 몸살을 앓았다.

그러나 지난 8월 9일 발행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이것은 시작일 뿐, 앞으로 극심한 폭염·가뭄·홍수가 더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류의 생존에 대한 적색 경보가 켜지자 각국 권력자들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월 세계 지도자들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 위기 문제를 논의하는 기후변화정상회의 (COP26)가 열린다.

하지만 COP26이 위기를 해결하리라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각국 정부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넷제로'(net-zero, 흡수량으로 배출량을 상쇄한다는 뜻)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너무 늦는 데다가, 실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UN은 현재 각국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로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고작 1퍼센트밖에 줄이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각국 정부들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극도로 꺼린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고 있다지만 이들의 진정한 관심은 기후 위기 해결이 아니라 신산업에서 주도권과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워싱'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은 최근 유엔 총회에 참석해 2023년에 열릴 제 28차 기후변화정상회의(COP28) 유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설비 용량을 늘려 왔을 뿐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추진해 왔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 대응 선도국가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10월부터는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조치로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수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아무 지장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COP26을 앞두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계획을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SK 등 한국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과도 논의해 확정하겠다고 한다!

이런 점들은 자본주의의 권력자들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윤 경쟁을 우선하는 관점으로는 자본주의에 뿌리박은 화석연료 기반 산업들을 전면 전환하는 일에 착수할 수 없다.**

화석연료 사용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 규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몽땅 폐쇄하고, 화석연료 사용 설비를 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이윤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11월에 열릴 COP26 회담을 앞두고 최근 9월 24일 국제 기후행동이 벌어졌고 회담이 열리는 동안에도 영국과 세계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질 것이다.

기후 위기를 극복할 희망은 강대국 정상들의 회의장 안이 아니라 그 바깥의 대중 투쟁에 있다.

이런 행동으로 지배자들이 기후 재앙을 막겠다며 제안한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2021년 10월 8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http://stu.workerssolidarity.org>

※ 전문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 성명은 <노동자 연대> 신문 기사를 참조했습니다.

